

## 2023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 2023년 중국경제 이슈와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한재진 연구위원 (hzz72@hri.co.kr)

## ■ 목 차

1. 중국경제 동향
2. 2023년 중국경제 이슈
3. 전망 및 시사점

- 2022년 중국경제는 연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변수로 당초 제시했던 5.5% 성장 목표치 달성은 실패함.
- 2022년 중국의 3, 4분기 GDP는 각각 3.9%, 2.9%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급랭 여파로 연간 GDP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3.0%를 기록
- 2022년은 제로 코로나 정책 부작용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3월~12월까지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기도 함.
- 2023년 중국경제 주요 이슈는 △의심받는 시진핑 3연임 효과, △좁혀려 돌아오지 않는 부동산 회복, △미·중 간 기술패권 심화 속 기술격차는 축소, △온라인 플랫폼의 부활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2023년 중국경제는 4%대 성장이 예상되긴 하나, 올해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 부실 확대 등 대내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3%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IMF 4.4%, OECD 4.6%, World Bank 4.3% 등 4%대 중반이 대세이나, 부동산 부실 등 불확실성에 따라 예상치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1. 중국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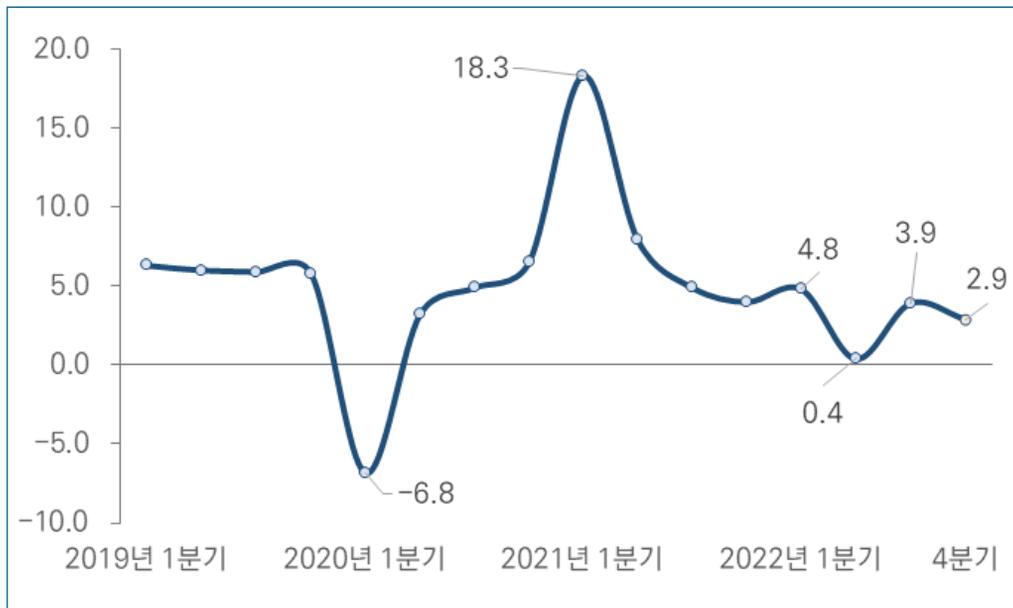
### 1) 2022년 경제 점검

- 2022년 중국경제는 연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대내외 변수로 당초 제시했던 5.5% 성장 목표치 달성은 실패함.
  -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GDP는 3%대 성장률을 보이며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월에 시작된 러-우 전쟁, 3월 상하이 봉쇄 단행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성장률 감소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은 3.0%를 기록하며 5%에 크게 못 미침.
  -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2022년 초 생산자물가(PPI)지수가 8~9%대로 영향권이었으나, 하반기에는 경기둔화로 점차 감소세로 전환
  - 다만, 2021년 12월 11일부터 코로나 확산 대응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Zero-COVID, 动态清零) 정책 일환으로 2022년 3월 단행된 ‘상하이 봉쇄(Shanghai Lockdown)’로 소비의 급격한 냉각을 초래

- 한편, 경제 및 소비 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표인 소비자신뢰지수는 역대 가장 낮은 80p대가 8개월 지속되는 상황
- 2022년 외수 경기는 3분기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2022년 연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7.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동년 10월부터 감소세가 지속
-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14.8%), EU(14.2%), 홍콩(9.7%) 등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수출 수요가 냉각되면서 4분기에 들어서며 급격히 냉각되는 상황
- 한편, 고정자산투자(누적) 증가율은 2022년 연간 5.1%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소매판매는 동기준 0.2% 감소하는 등 내수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
  - 소비의 성장 동력인 온라인 소매 증가율도 연간 4.0%로 2021년 14.1% 성장에 비해 크게 둔화한 양상을 보임

[그림 1] 분기별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2)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 2022년은 제로 코로나 정책 부작용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
  - 2022년 중국경제는 상반기 러-우 사태 및 코로나 대응 도시봉쇄 등 하방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5월, 8월, 9월, 11~12월 연이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
    - 2022년 연간으로 볼 때, 3월, 5월, 8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었으며, 9월, 11~12월 사이에는 부동산 수요 견인을 위해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관련 정책 집중
    - 블룸버그(Bloomberg)에서 추산한 2022년 중국의 경기부양 총액은 약 35.5조 위안(5조 3,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
    - 이는 세금감면액,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SPB), 중국인민은행 이익이전액, 지준율 인하액(RRR), LPR, MLF, 대출프로그램 등 금융대출 관련액 등을 포함

[표 1] 2022년 중국의 주요 경기부양 정책

구분	정책 범위	주요 분야	요인
3.5.	안정성장, 강소기업 육성, 세금부담 완화, 고품질, 쌍탄소 시행, 지역개발 등 6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반도체, AI 등 신산업 육성</li> <li>중소 및 영세 기업 세금부담 완화</li> </ul>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기 위축 방어
5.24.	6개 부문, 33개 정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7개), 금융통화(5개), 투자 및 소비(6개), 식량 및 에너지 안전(5개), 공급망 안정(7개), 민생(3개)</li> </ul>	도시봉쇄 여파 대응
8.24.	19개 추가 정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 및 재정지원 및 인프라 투자</li> </ul>	경기 회복지연 대응
9.30.	부동산 정책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대출금리 완화, 세금환급 등</li> </ul>	부동산 수요 진전
11 ~12월	부동산 자금 조달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대출 금융기관 대출집중도 관리 예외적용</li> <li>부동산 기업 선분양대금 인출사용 지원</li> <li>6대 국유은행, 부동산기업과 총 1.6조 위안 신용공유(MOU) 체결</li> <li>부동산 기업 M&amp;A 후 상장허용, 비공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허용</li> <li>상업은행 2,000억 위안 주택완공인도 무이자 재대출 지원</li> <li>16개 금융지원조치를 통해 각 상업은행앞 주택완공인도 특별대출에 대한 협조대출 지시</li> </ul>	부동산 주택 수요 진작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22),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22) 등 자료 인용

## 2. 2023년 중국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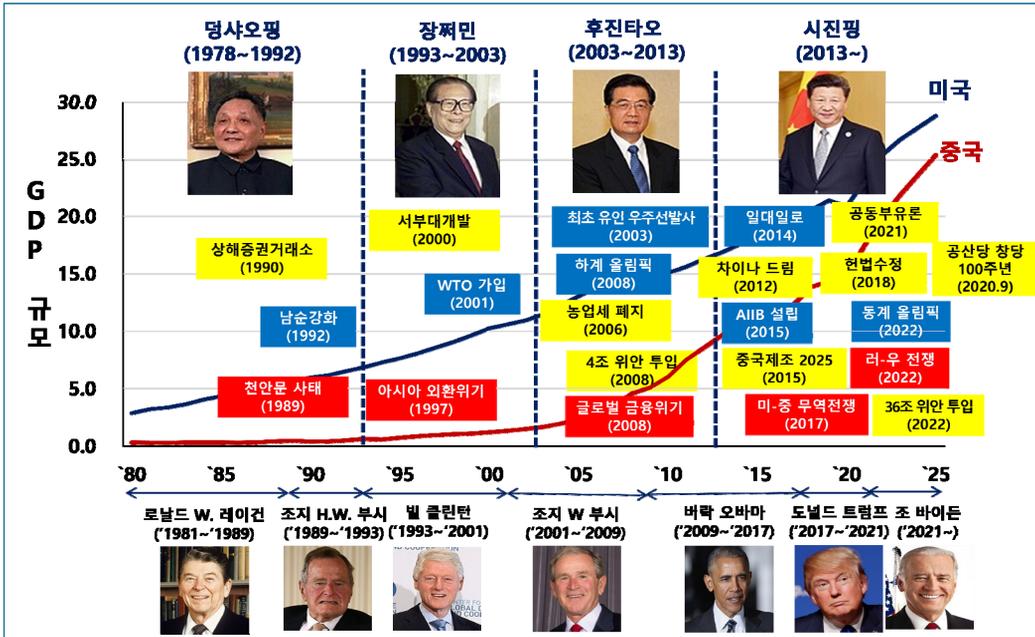
### 1) 의심받는 시진핑 3연임 효과

▣ 지난해 10월 개최된 20차 전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역사상 최초로 3연임에 성공

- 중국은 덩샤오핑부터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지난 44년간 4명의 지도자가 선출되었으며, 남순강화(1992), WTO 가입(2001), 하/동계 올림픽 개최(2008/2022) 등 시기별 대내외 개방 및 경제력 강화에 역점

[그림 2]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도자별 주요 정책 이슈

(단위: 조 달러)



주: 중국 지도자 재임 기간은 3월 전인대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중국정부망, 바이두, IMF 등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장쩌민(1993~2003), 후진타오(2003~2013) 등 중국의 경제력이 점차 부상하던 시기에는 주로 지역 및 과학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대내외 정책 추진
  - 장쩌민 시기에는 서부대개발(2000), WTO 가입(2001) 등 지역 및 개방화 추진 및 성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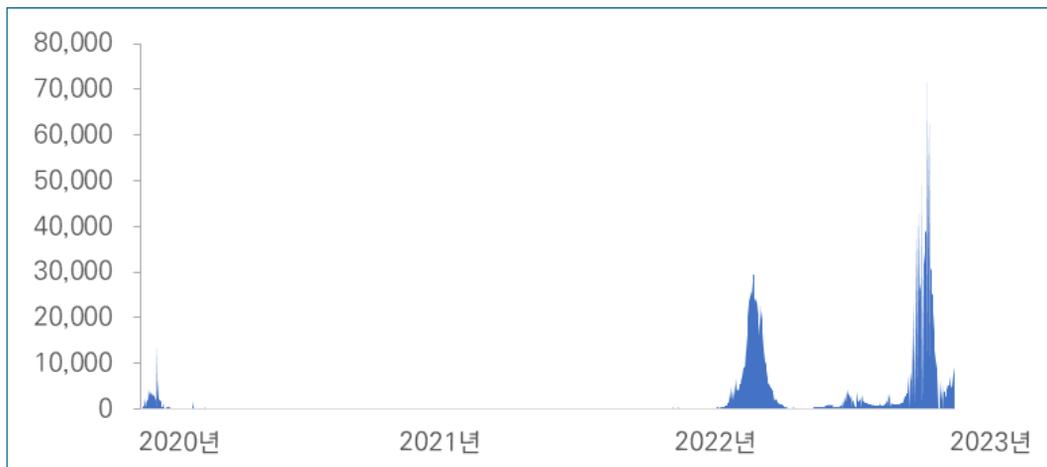
- 후진타오 시기는 '선저우 5호' 유인 우주선 발사(2003), 하계올림픽 개최(2008) 등 대외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역점
- 시진핑 시대(2013~)로 진입하면서 G2 수준의 경제력을 앞세워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부유(共同富裕), 대국굴기(大國崛起) 등 대외 역량 과시

■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경제 및 외교적 대립 양상을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대외협력 및 교류 등에서 다른 지도자에 비해 리더십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에 노출됨.

- 과거 지도부와 달리 시진핑 정부로 들어서며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패권에 대립적인 자세로 일변하며 자국의 이익에 편중된 정책을 강화한다는 외부의 시선에 직면
  - 일대일로(2014), AIIB 설립(2015), 중국제조 2025(2016), 미-중 무역전쟁(2017), 차이나 드림(2012), 공동부유론(2021) 등 대부분의 주요 정책 및 전략이 미국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전환
- 또한, 2022년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 일환으로 시작된 도시봉쇄 등 경직된 정책이 경제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with Covid) 시점에 대한 정책 판단 오류로 향후 전반적인 정책 운영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산 추이

(단위: 명)



자료: Our World i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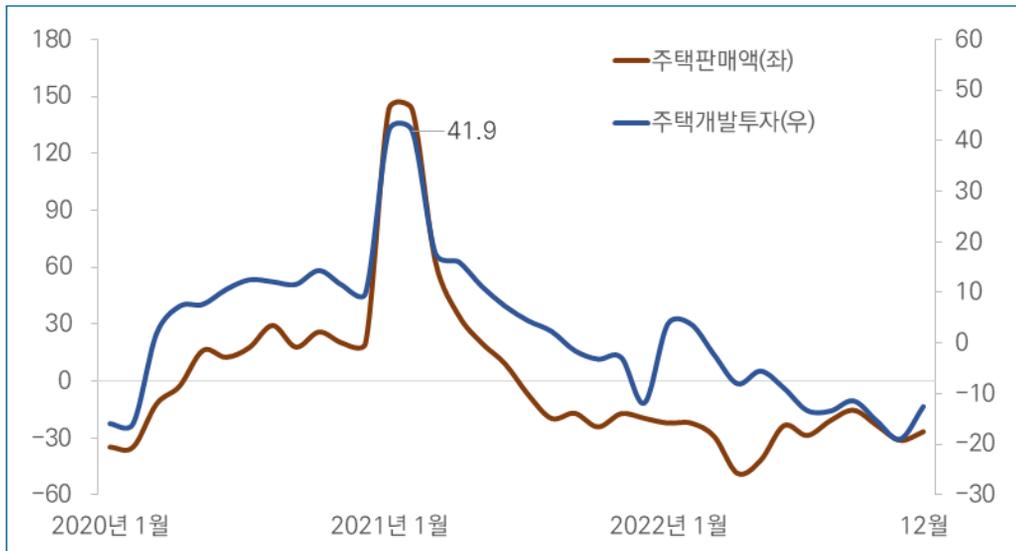
## 2)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부동산 회복

### ■ 2021년 헝다그룹(恒大集团) 등 부동산개발업체 부실화로 시작된 부동산 불황이 15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올해 중국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

- 최근 부동산 경기는 2021년 헝다사태 이후 18개월 연속 냉각국면 지속
  -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 증가율은 2022년 12월 현재 -0.02%로 2021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 둔화 지속
  - 또한, 중국 부동산 수급을 나타내는 주택판매액 및 주택개발 투자 증가율이 2022년 12월 현재 각각 26.7%, 12.6%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짐.

[그림 4] 중국 주택판매액과 주택개발투자 증가율 추이(2020년 1월~2022년 12월)

(단위: 증가율, %)



자료: CEIC.

### ■ 2022년 2분기 현재,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이 300%에 육박하면서 2023년 부동산 업황 악화가 지속될 경우, 금융위기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는 상황

-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한 2022년 2분기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약 295%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급증

- GDP 대비 부문별 부채 비중을 살펴보면, 가계 61.6%, 기업 158.7%, 정부 75.0% 등으로 정부 부채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 이에 따라, 2022년 말부터 단행되고 있는 금융지원 등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부채 확산 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3) 미·중 간 기술패권 심화 속, 기술격차는 축소

#### ■ 지난 2018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시작으로 심화한 미·중 무역전쟁은 점차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기술력 제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확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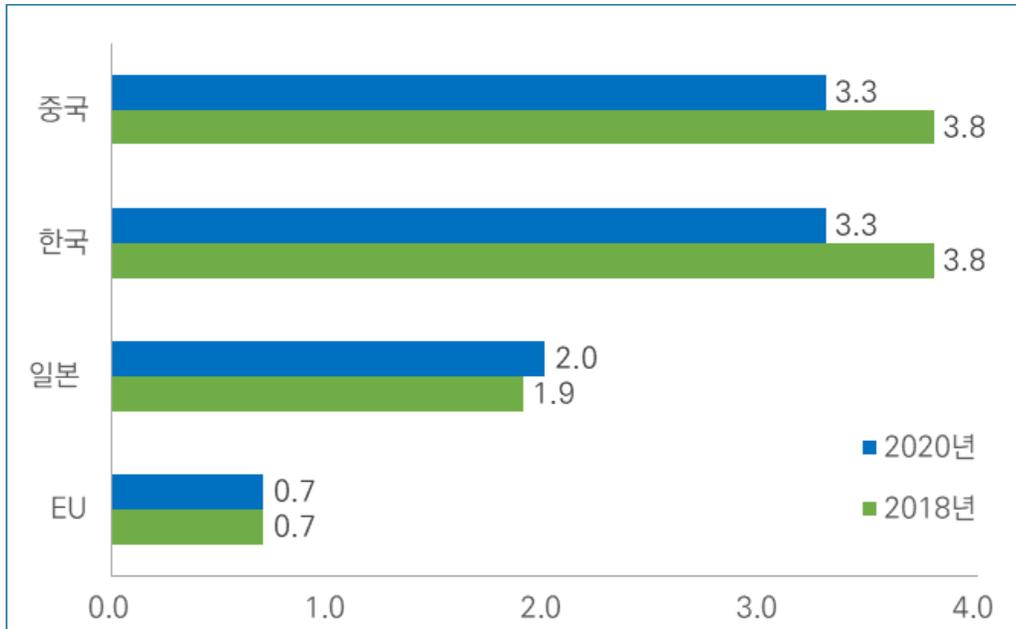
- 중국은 역대 지도부에서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국가경쟁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도화해옴.
  - 덩샤오핑의 ‘과학기술은 제1의 생산력’, 장쩌민의 ‘과교흥국(科教興國)’, 후진타오의 ‘혁신형 국가 건설’ 등 역대 지도자는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적 중요성을 강조
  - 시진핑 주석도 2016년 발표한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을 통해 2049년(건국 100주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오른다는 과학기술 혁신 강국 건설 3단계 목표를 제시
- 이에 따라,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특허 보유와 제품 수출 등에서 글로벌 1위 국가로 부상하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
  - 독일 특허정보 분석업체인 아이플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5G 필수 표준특허 4,796건 중 화웨이가 2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삼성전자(12%), 퀄컴(10%), 노키아(9%), 에릭슨(7%) 등 순으로 조사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6,542억 달러로 전 세계 첨단기술 제품 수출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분석

#### ■ 미·중 간 기술격차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나, 최근 들어 격차 축소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중점과학기술분야의 평균 기술격차는 202년 기준 3.3년으로 축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에 따르면, 전체 120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국가 간 기술격차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현재 중국은 한국과 3.3년으로 미국과 같은 기술격차를 나타냄.

[그림 5] 미국 대비 주요국 기술격차 비교

(단위: 년)



주: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0”년으로 했을 때, 기술격차 년 수를 의미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1개 중점과학기술 부문으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ICT·SW 등 분야에서 미국과의 2년 이하의 기술격차를 나타냄.
  - 11개 부문 중 중국이 한국보다 미국에 대한 기술격차가 작은 분야는 2020년 현재, 우주·항공·해양, 국방,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ICT·SW 등 5개 부문으로 2018년보다 1개가 더 추가됨.
  - 특히, ICT·SW 등 첨단기술 분야는 일본을 추월한 상태이며, 가까운 미래에 EU도 추월할 것으로 추정됨.

[표 2] 11대 분야별 최고기술국 대비 주요국 기술격차 비교

(단위: 년)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수)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건설·교통(11)	3.1	2.6	3.8	3.2	1.4	1.6	0.2	0.1	0.0	0.0
재난안전(4)	3.4	2.9	4.3	3.3	1.1	1.8	1.1	0.9	0.0	0.0
우주·항공·해양(7)	8.4	8.6	5.3	5.1	4.1	3.9	1.6	1.8	0.0	0.0
국방(3)	6.7	5.5	4.3	3.8	5.6	4.7	2.5	2.3	0.0	0.0
기계·제조(13)	3.4	2.8	4.2	3.1	1.2	1.4	0.0	0.0	0.1	0.2
소재·나노(5)	3.0	2.5	3.7	3.2	0.4	0.6	1.1	1.1	0.0	0.0
농림수산·식품(9)	4.0	3.2	4.3	3.6	1.8	2.1	0.1	-0.1	0.0	0.0
생명·보건·의료(21)	3.5	3.1	3.7	3.0	2.2	2.4	1.2	1.1	0.0	0.0
에너지·자원(18)	4.0	3.7	3.9	3.5	1.8	1.9	0.3	0.3	0.0	0.0
환경·기상(12)	4.1	3.7	4.9	4.6	1.9	2.0	0.3	0.3	0.0	0.0
ICT·SW(17)	2.1	1.9	1.9	1.6	1.5	1.6	1.0	1.1	0.0	0.0

주: 최고기술 보유국을 “0”년으로 했을 때, 기술격차 년 수를 의미.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4) 온라인 플랫폼의 부활

##### ▣ 최근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기조에서 적극 지원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호재가 이어질지 주목

-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조치를 발표
  - 2021년 2월 7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반독점 지침(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을 발표, 이후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이 정식 시행되고, 18일 중국 국가반독점국(国家反垄断局)이 공식 출범
  - 중국 국가반독점국이 발표한 ‘반독점’ 행정 처분 사건은 118건으로 2015~2020년까지 6년간 처벌한 사건 수의 총합과 유사한 수준이며,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이 75%를 차지

- 중국의 대규모 내수시장 형성과 디지털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독점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가반독점국의 등장은 반독점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의 권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

[표 3] 반독점 관련 사건 추이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반독점 건수	12	8	14	14	12	12	33	34	118

자료: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반독점국.

- 이로 인해 중국의 빅테크 선두 기업의 매출 성장이 둔화하고 기술주(技術株)의 주가가 하락
    - 미국 빅테크 기업(메타, 테슬라 등)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IT 생태계를 재편하는데 몰두하고 있지만, 중국 빅테크 기업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침체의 늪에 빠짐.
    - 중국 규제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속하면서 중국의 탑5 빅테크 기업(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탄, 핀뉘뎬) 주가는 2022년 10월 초 기준, 2021년 2월 이후 1.5조 달러(한화 약 1,911조 원)가 증발
  - 또한, 과도한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규제는 중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 초래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당국 목표치(5.5%)를 밑도는 4.8%에 수준에 그쳤으며, 실업률도 2020년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정부 규제로 인해 중국 IT 업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주가가 폭락하자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를 표명
-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의 규제 완화는 최근 중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경제 냉각국면 탈출을 위해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가능성도 상존

-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디지털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2012~2021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11조 위안(약 2,131조 8,000억 원)에서 45조 위안 이상으로 증가했고, 디지털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6%에서 39.8%로 상승했다고 발표

### 3. 전망 및 시사점

- 2023년 중국경제는 2021년부터 부동산발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진작을 위해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기조 유지에 맞는 정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말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2023년 중국경제 관련 5대 핵심과제를 제시
  - 2022년 12월 14~16일 열린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는 주석, 국무원 총리 등 핵심 지도부가 참여하여 다음 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결과는 2023년 3월 전인대에서 발표됨.
  - 이번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국영 및 민간 경제 상생 △외자유치 및 대외개방 △중대 경제 및 금융리스크 방지 등 올해 중국경제 정책 전략을 제시

[표 4] 2023년 중국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전략

분야	핵심 전략 내용
내수 확대	소비회복 최우선으로 주거환경, 신에너지차 지원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	제조업 및 공급망 발전을 위해 핵심 기술 및 부품 부문 개선 강조, 신에너지·인공지능·저탄소 등 첨단기술 R&D 촉진
국영 및 민간 경제 상생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영기업 성장을 위한 법률, 제도적 지원 강화
외자유치 및 대외개방	정부 투자 및 입찰에서 외자와 중국기업 간 차별 폐지, 지식재산권 및 합법적 권익 보장은 물론 대외개방 및 CPTPP 추진
중대 경제 및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 발전 및 부동산개발기업 디폴트 방지를 위한 자금 조달 등 지원,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관리 방침

자료: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 전문(인민망), 국제금융센터 등 자료 종합.

- 2023년 중국경제는 4%대 성장이 예상되긴 하나, 코로나19 재확산, 부동산 부실 확대 등 대내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3%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남아 있음.
- IMF 등 주요 국제기관은 올해 중국경제가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IMF 4.4%, OECD 4.6%, World Bank 4.3% 등 4% 중반대를 전망
  - 한편,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올해 중국경제가 5.1% 내외로 비교적 낙관적 성장을 예상했으나, 부동산 리스크 변수 등 부정적 시나리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표 5] 주요 기관의 2023년 중국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3(E)	2024(E)
IMF(2022.10)	4.4	4.6
OECD(2022.11)	4.6	4.1
World Bank(2023.01)	4.3	5.0
중국사회과학원(2022.12)	5.1 내외	-
8대 IB 평균(2022.12)	4.8	5.3

주: 8대 IB는 Barclays, BNP Paribas, BoA-ML, Citi,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UBS 등을 말함.

자료: IMF, OECD, WORLD BANK, 국제금융센터 등 자료 종합.

## 참고자료

- 국제금융센터(2022), 「중국 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보고서 제목」, Brief.
- 현대경제연구원(2022), 「글로벌경제, 높아지는 하방압력 속 차별화 진행」, 경제주평. 22-13.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22), 「최근 중국정부의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현지정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 「2020년 기술수준평가」, 2020-058.
- 국회입법조사처(2022), 「미중 기술 패권 경쟁시대, 중국의 대응 전략과 시사점」, 외국입법정책 분석 제21호.
- 연원호 외(2020),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一图读懂2022年中央经济工作会议” 人民网. 2022. 12. 17.  
[https://politics.gmw.cn/2022-12/17/content\\_36240296.htm](https://politics.gmw.cn/2022-12/17/content_36240296.htm)(검색일: 2023년 01월 02일)
- “시진핑 주도의 과학기술혁신강국 주요시책” S&T GPS. 2018. 7. 9.  
[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lssued/view.do?polilsueld=ISUE\\_000000000000909&menuNo=200&pageIndex=8](https://now.k2base.re.kr/portal/issue/ovsealssued/view.do?polilsueld=ISUE_000000000000909&menuNo=200&pageIndex=8)(검색일: 2023년 01월 06일)
-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 국제결제은행(<https://www.bis.org/statistics/totcredit.htm>).
- CEIC(<https://www.ceicdata.com/ko>).
-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